

[오피니언]

월/요/광/장

임내현



지난 4월에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펑크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의 강 제집행에 수천 명의 주민이 극렬 저항하자 만 5천여 경찰과 군 병력이 이를 제압하고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이로부터 단 하루만에 1,200명의 시민단체 소속 시위 대가 20여 군데에서 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 경비 병사들을 폭행하여 10여명이 다치고 중상을 입은 2명이 병원에 후송되었다.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어떠한 공공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군사시설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경비하는 군 병력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장기간 검사생활을 했던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비단 이 사례만이 아니라 핵폐기장 설치문제로 부안지역에서 발생한 수많은 시위사태 등 지난 수십 년간 많은 불법집단 행위나 폭력성 시위가 이어져 온 것은 주

지하는 바와 같다. 그리고 그러한 시위를 제지하거나 일반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에 대해 저항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더욱이 이번에는 군인에 대한 저항까지도 어렵지 않

‘法治’를 다시 생각한다

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법과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는 산업현장에서의 과격 노사분규, 교육현장에서의 반교육적 집단행동, 사회 각처에서의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한 대립 갈등을 초래하여 막대한 경제적 교육적 손실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의 정당한 권리마저 파괴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 우리사회에 이와 같은 법과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가 생겼을까. 나는 역사적 요인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법집행기관들의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하거나 특정 행위를 단속하는 경우에 관계자들의 집

중대한 요인들로 본다.

우선 우리 나라가 장기간에 걸쳐 일제 시대와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법과 공권력에 대한 저항의식이 형성되었고 상당 부분 정당화되었던 역사적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식민당국에 대한 저항은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식되고 상당부분은 정당화할 만한 것이어서 저항행위자들은 불법을 행한다는 인식 내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보통이었다. 군에 대한 저항은 매

단행위가 있을 때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요건이 다소 미비되어도 권리를 부여하거나 단속요건이 충분한데도 이를 주저하거나 중단하는 행태를 보여 왔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리고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소주와 재판에 있어 일부 온정주의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았는지 반성해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제는 시민들과 정부 모두가 올바른 법의식을 가지고 질서를 확립해야 할 때이다. 시민들은 법과 공권력이 자유를 양립하는 지혜의 도구라는 구시대에나 있을 법한 편견을 떨쳐버리고 질서 속에서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여 공존공용을 누리게 하는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들은 권리를 부여하거나 단속을 함에 있어 편의주의적 발상을 지양하여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야 할 것이며 형사사법에 관여하는 기관들도 온정주의적 요소를 지양하고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처벌을 엄정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 확립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올바른 법의식을 정립하여 질서를 찾을 때이다. <변호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대법관 인선마저 ‘코드’ 따져선 안된다

오는 7월 임기만료로 퇴임할 대법관 5인의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참여연대와 법원노조,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이 25명의 법조계 인사를 추천했고 오늘은 대한변협이 후보자 10명을 추천한다. 이번 대법관 인사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관심도는 여느 때와 다르다. 5명이 한꺼번에 바뀌면서 이들의 성향이 향후 대법원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법관 인선 기준에 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사 후보자로 거론되는 법조인들의 과거 판결을 이념적 성향으로 분류하면서 사법개혁의 잣대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과거 사법부가 막강한 정치권력 앞에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점이 이들의 주장에 뒤받침하고 있다.

사법부라고 시대 변화의 대세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일각에서 너무 짚은 나

인권도시 광주, 印尼 지진 참사 관심 갖자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섬의 인구 밀집 지역 쪽카르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4천5백여명이 사망하고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외신은 수만명의 부상자들이 소독약과 마취제도 없이 노천에서 응급처치만을 받으며 울부짖는 모습을 전하고 있다.

인권과 평화의 도시라고 불리는 광주는 지난 쓰나미 피해 발생 때나 파키스탄 대지진 참사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호팀과 의료진을 보내 인도주의를 실천했으며 이는 타 자치단체들의 모범이 되는 일이었다. 우리정부가 일자적으로 15명 규모의 의료진을 인도네시아 현지에 급파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광주와 전남에서도 이들에 대한 구호의 손길을 신속하게 뻗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구조대나 의료진의 과정도 좋고 의약품과 식수, 생필품을 현지에 직접 전달하는 것도 광주의 인류애를 널리 알리는 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구촌 시대에 멀지 않은 이웃나라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관심을 가져주는 자세다.

無等 鼓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도망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평소에 그 것을 이루고자 찾아다니는 것은 더욱 어리석다.”

로마의 대학자 세네카의 말이다. 세네카가 이 말 속에서 지목한 ‘그 것’은 바로 죽음과 공자, 두 가지다. 세네카는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자 섭정이라는 영광의 자리까지 오른 당대의 인물이었지만 미친 권력자 네

로의 의심을 받아 자살로 인생을 마쳤다. 죽음과 공자는 교묘하게 버무린 대학자의

은유는 높은 공지를 탐하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이로 인한 불행, 그리고 인생의 덫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와 가장 밀접한 교역상대국이자 우리나라에 90년대부터 산업연수생을 가장 많이

한 이름의 노새를 출마시켰다. 후보 등록 서류엔 노새 발굽 프린트를 찍고, 자신이 공증인으로 서명을 했다. 선거날이 되자 이 노새 후보는 유권자의 절반

이 넘는 51%의 지지를 얻어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시장은 노새 후보를 낸 이유로 많은 유권자들이 아주 부주의하게 선거에 임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서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미국 선거 민주주의 관련 연구에서 유권자의 부주의와 속성을 비웃는 유명한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5·31 지방선거가 이제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 도 1만명이 넘는 선출직 희망자들이 출마했다. 공직에 대한 욕구

는 이번에도 예외없이 선거판을 훈들여놓고 있다.

반면 유권자들은 후보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다. 후보로 나서는 벼슬 탐욕과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겹치면

우리나라에서도 노새가 후보가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장애인 치과진료센터 공청회를 보며

힘들고, 치과진료를 받기 위해 치과까지 가기도 수월하지 않다보니 경증장애인들보다 중증장애인에게 치료진료를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치과진료센터 건립공청회가 열렸다.

장애인들은 많은 치과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충치와 치주질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구강건강관리능력이 부족하다보니 상당수의 장애인은 통증이 느껴질 때에야 비로소 치과를 찾는다. 지체장애와 발달장애, 자폐증 그리고 뇌성마비 등을 갖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구강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치과전문병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이나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 장애인들의 구강보건제도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치료를 해주고 있다.

또 모든 환자와 보호자에게 구강위생 교육과 일차기관에서 평상시 예방관리를 통해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등 장애인들의 진료시스템이 잘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원원에서는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많은 연구와 노력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는 어느 가정이나 누구에게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길 수 있

안마사 자격, 정부에 호소한다

리는 현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다.

후속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장애인인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내린 결정이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들은 유일한 생계수단을 박탈함과 동시에 안마사들의 가족들은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각 시·군 보건소에 안마소를 설치한다는 등 비현실적인 대안이

내놓고 있다.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설득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꿈도 희망도 사라진 암흑만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납득할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당장 생계유지조차 어렵게 된다.

이것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들은 특수학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2~3년의 피나는 교육과 평생을 거쳐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안마사라는 직업인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삶에 책임지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단순히 국민의 직업 선택의

차량 사고시 안전 삼각대 설치후 안전지대서 수리해야

경미한 사고라도 도로 가운데에 사고 차량을 방지한채 서로 잘잘못을 짜며 삿대질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특히 출근시간 가벼운 접촉사고로 차가 오도가도 못하게되면 짜증이 나기 쉽다.

대다수 교통사는 조그만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고장이 발생할 경우 서로 약속된 방법의 하나로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간에는 안전표지와 함께 사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하는 것이 또 다른 사고를 막는 길이다. ▲이남영·광주시 서구 광천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목욕탕, 탈의실 옷장도 깨끗이 청소해둬야…

주말에 가벼운 운동을 한 뒤 대중목욕탕을 자주 찾는데 탈의실을 소홀히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이용자가 목욕탕에서 가장 먼저 이용하는 옷장은 하루에도 여러 손님이 번갈아 사용하기 때문에 청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최순옥·광주시 북구 운정동

목욕탕 탈의실 옷장을 열 때마다 먼지가 날리는가 하면 불쾌한 땀냄새 등이 고스란히 배어 나올 때도 있다.

목욕탕 옥조나 샤워 시설을 깨끗이 관리하면서 탈의실 옷장도 깨끗이 닦고 탈취제나 소독약을 비치해놓는 것도 손님들을 위한 기본적 서비스가 아닌가 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	시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F A X 222-0118〉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 부 2200-629	〈F A X 222-8005〉
정 치 부 2200-616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8	판 매 부 2200-55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7-9500〉
〈F A X 222-4267〉	총무부 2200-570	디자인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시 앱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